KRIHS POLICY BRIEF
국토정책 Brief
제 384 호 2012. 6. 4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

김창현(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비수도권 및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분산이 나타나고 농촌활성화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고 있음

- 2005~2010년 사이에 전체 베이비붐 세대 인구 중 수도권과 도시(洞)지역의 인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농촌(邑 · 面)지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약 2만 3천 명 증가함
-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전이되기 시작하는 202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본격적인 감소와 고령인구 비율의 급격한 상승이 전망됨

■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약 2/3 정도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고, 향후 10년 동안 농촌으로의 이주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조사됨

-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66.3%가 은퇴 후에는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으며, 13.9%는 이미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노후의 전원 · 휴양 · 여가 활동을 위한 농촌이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정 | 책 | 적 | 시 | 사 | 점 |

1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전원 지향 성향을 농촌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비수도권 및 농촌으로의 인구분산과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

2 농촌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전원주거 – 경제활동 – 의료복지 – 활력증진 등 다기능 복합형의 농촌정주거점을 조성 ·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

3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 지자체 · 민간이 연계 · 협력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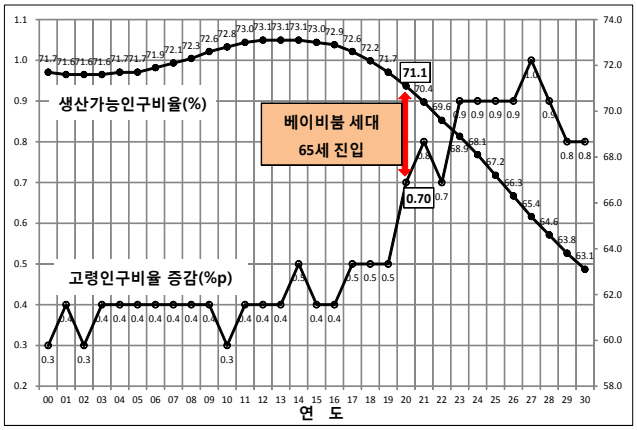
※ 본 국토정책Brief는 국토연구원에서 2011년 발간한 김창현 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1.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동향

■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이들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의 9년 동안 출생한 인구로 2010년 현재 695만 명에 달하며, 전체인구(내국인)의 14.5%를 차지
- 베이비붐 세대 중 1955년도에 출생한 인구가 2010년도에 만 55세에 달함으로써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도래
-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율의 증가폭이 2020년 0.7%p, 2025년 0.9%p 등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 71.1%, 2030년에는 63.1%로 감소하는 등 하락세 가속화가 예상

[그림 1]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의 장래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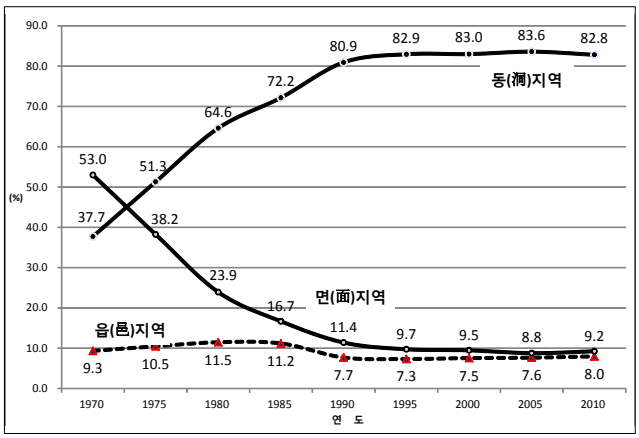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국가통계포털.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비수도권과 읍·면의 농촌으로 분산하는 경향이 나타남

- 2010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 695만 명 중, 도시(洞)에 전체의 82.8%인 576만 명, 농촌지역(邑·面)에는 17.2%인 1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
-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0.8%p 감소한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는 그 비중이 각각 0.4%p씩 확대

[그림 2] 베이비붐 세대의 도농 간 분포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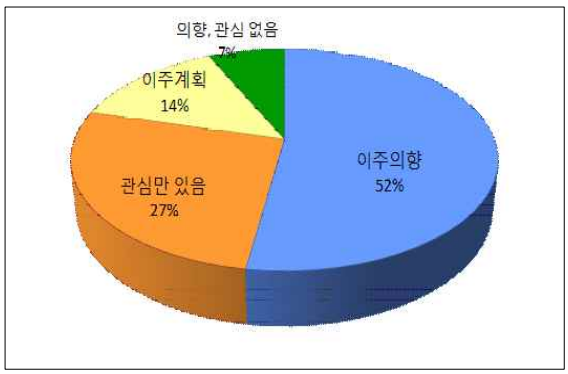
- 2010년 현재 수도권에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48.5%가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의 비중은 0.3%p 감소한 반면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의 비중은 0.3%p와 0.1%p 증가

2.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離都向村) 성향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 의향과 목적

-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2/3 정도가 은퇴 후 농촌이주 의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13.9%는 농촌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음
- 구체적으로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경우 85.8%가 향후 10년 이내에 농촌이주를 희망
  - 응답자의 41.8%가 5년 이내, 그리고 44.0%가 5년에서 10년 이내에 농촌으로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

[그림 3]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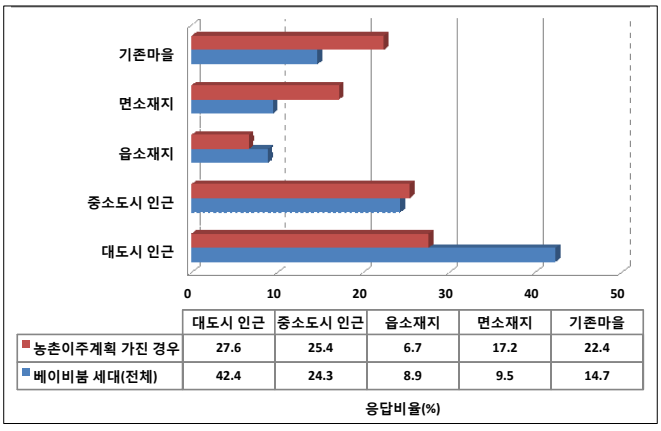


-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목적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노후 전원 · 휴양 · 여가 활동 영위를 위해서"가 6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이에 이어 "농어촌 공동체 사업조직에의 참여를 통한 일자리 구득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가 15.6%를 차지
  -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경우, 농림수산물 생산 · 가공 · 판매(11.2%), 음식점 · 숙박업 · 펜션 · 체험농원 경영(8.2%)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공간 선호구조

-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는 대도시 인근의 농촌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비수도권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24.5%)을 특히 선호
-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경우 비수도권의 농촌마을(20.9%), 면소재지(14.2%), 중소도시 인근 농촌(16.4%)을 선호

[그림 4]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희망 농촌지역의 입지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 인근	읍소재지	면소재지	기존마을
농촌이주계획 가진 경우	27.6	25.4	6.7	17.2	22.4
베이비붐 세대(전체)	42.4	24.3	8.9	9.5	14.7

［표 1］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희망 농촌지역 분포

구 분	이주 희망 농촌지역
서 울	경기(43.6%), 강원(14.6%), 전남(7.2%), 경남(6.3%)
부 산	경남(55.0%), 경북(6.4%) 경기(5.0%)
대 구	경북(70.5%), 경남(6.3%)
광 주	전남(79.5%), 전북(4.5%)
대 전	충남(41.5%), 충북(15.1%), 경기(5.7%), 전남(5.7%)

베이비붐 세대의 정책 수요

- 도시민의 농촌 이주 ·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료 · 복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 개선(45.9%)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 소득창출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일자리 마련(21.6%)이 중요
  -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계층이나 50대 후반에서는 부모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여건과 자녀세대의 체험 · 여가 · 방문 환경 조성도 중요
  - 이외에 농촌정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농촌정착 및 영농 정보 ·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 주거에서는 전원마을 등 신규 주거단지를 가장 선호하는 가운데 별장 등 독립주택과 기존 마을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
  - 전원마을 등 신규 주거단지(40.6%), 별장 등 개별 · 독립적 주택(30.2%), 기존 마을의 주택(29.1%) 순으로 주거입지를 선호

3.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전략

전원 주거공간의 조성

-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목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원 · 휴양 · 여가활동' 수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이 필요
  -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 등을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유치를 촉진
- 전원마을, 농어촌 뉴타운,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실버주택 등 전원 주거공간 조성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

■ 지자체의 특성과 베이비붐 세대의 도시민 입주수요 등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설계로 주거단지를 조성

경제활력 창출기회의 마련

■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목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농 등 일자리 획득 등을 통한 경제적 활동' 기회를 창출

- 농림수산물의 생산 · 가공 · 판매,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사업조직 등을 통한 재능 제공과 활기차게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

■ 농수산물의 생산 · 가공 · 판매, 각종 프로그램의 교육 및 컨설팅, 사회적 기업 등에의 참여와 관련된 기존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

■ 농촌 지자체의 장소적 ·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림수산업, 상공업,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별 지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료 · 복지환경 조성

■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항목으로 지적한 '의료 · 복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을 적극 추진

■ 요양병원 · 요양시설, 의료 · 복지시설 등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

- 질적 수준 제고와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연계 · 통합하여 설치 · 관리 ·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 도시민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관리, 진료 · 치료 등 의료거점으로 기능과 역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

활력증진공간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농촌전원 속에 거주하면서 휴양 · 여가활동을 통해 활력을 증진해가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건강 · 장수 프로그램을 운영

- 문화 · 체육 및 건강 · 복지 생활 향유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
  - 휴양 · 여가 및 문화 · 체육시설 등 활력증진공간 조성, 각종 건강관리 및 회복 프로그램, 학습 · 사회활동, 생산적 여가활동 등 건강 · 복지 생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소관부처별 사업들을 연계 · 통합하여 운용 효과를 제고
  - 문화 · 체육시설(문화체육관광부), 건강장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요양 · 보건 · 의료(보건복지부) 관련 사업들을 연계 · 통합하여 운용

4. 정책적 시사점

- 전원주거 - 경제활동 - 의료복지 - 활력증진 등의 다기능 복합단지 혹은 농촌 생활권 단위별 네트워크 형태의 새로운 농촌활성화 거점을 조성
- "전원휴양 · 의료복지 · 활력증진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 지자체 · 민간 간에 상호 기능과 역할을 분담
  - 중앙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나 지침 등을 통해 기존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 민간의 운용을 뒷받침
  - 지자체는 지역특성과 수요 여건에 의거하여 지역특화형 정주거점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 민간은 사회적 기업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소프트한 측면의 운영과 관리를 맡음
- 추가적 재원확보나 예산편성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 전원 주거공간 조성, 귀농 · 귀촌 관련 대책, 건강, 장수, 의료복지 등과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사업 및 정책들의 연계 · 통합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설문조사 결과 일정수준 수요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단계적 추진을 검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김창현 연구위원 (chyunkim@krihs.re.kr, 031-380-015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양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화 031-380-0114 팩스 031-380-0470 홈페이지 www.krihs.re.kr

수록된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호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KRIHS